

“오늘부터 공사 현장 장비·인력 투입”

이병훈 문화수도 추진단장 강행 방침 5월 단체와 물리적 충돌 불가피할 듯

옛 도청 별관이 오는 3월 중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전당 건립 공사 재개에 따른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우선 지난 17일 옛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공대위)와 별관 철거 후 상징물을 건립하기로 합의한 만큼,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별관 건물의 구조와 내부 형태 등에 대한 실측작업을 진행, 5월 상징물 건립과, 별관 축소모형 제작을 위한 자료를 축적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별관 철거는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상징물 건립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까지 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에 앞서 2월 말 문화전당 공사 재개를 위해 19일부터 공사 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께 도청 별관 건물과 인접한 옛 전남도의회 건물 해체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농성 중인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재개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단장은 “공직자로서 공무집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 방해 가져본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성중인 유족회, 부상자회와 다양한 채널을 가동,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추진단이 이같이 강경방향을 밝힘에 따라 5월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월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진입해 ‘도청별관 철거반대’와 이병훈 추진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실제 별관철거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는 ‘사전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추진단과 공대위간 합의내용에 대해 일부 5월 단체들이 만족하지 못해 공대위를 탈퇴했지만, 이는 공대위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며 “더 이상 전당건립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도청별관 철거·보존 논란 8개월... 관련 단체 입장

“공대위, 별관 철거 합의 약속 지켜야”

◇최철 아시안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공대위가 별관을 철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상징물을 건립하는 안에 합의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한다. 그러나 18일 추진단의 기자회견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5월 정신에도 걸맞지 않다. 이는 반 민주적인 것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광주 정신을 회색시키는 것이다.



“공대위 중재 위임받아 합의안 끌어냈다”

◇박주선 의원(민주당·광주 동구)=5월 단체들을 대표하는 회장들로 구성된 공대위로부터 중재를 위임받아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개인적으로는 별관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사업인 문화전당 건립 사업을 재개하고 5월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상징물 건립을 끝자로 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중재안 합의 지체 공대위 내부 문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5월 단체들로 구성된 ‘옛 도청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민주당 박주선의원(광주 동구)에게 중재권을 위임한 만큼 별관철거 합의안은 존중돼야 한다. 5·18유족회, 부상자회가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공대위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이제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



“별관 철거 동의해 준 적 없다”

◇정수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공대위 공동위원장이로서 합의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 공대위에 참여한 한 단체인 구속부상자회와 추진단의 합의문 작성 사실을 17일 오전에야 알았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별관의 3분의 1을 철거하고 나머지를 보존하는 유족회와 부상자회의 입장을 추진단이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별관 사수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신경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옛 도청 별관을 보존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이다. 추진단과 정치인이 몇 사람 말을 듣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현재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별관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모든 시민들 공사 재개 기다리고 있다”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동구 주민들과 모든 시민들이 문화전당 공사의 재개를 바라는 만큼 하루 빨리 전당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동구 지역 주민들은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문화전당의 조속한 완공을 염원하고 있다.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될 경우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월단체, 공공단체로서 역할 고민해야”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회장=5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별관을 철거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가슴 아프지 않았겠는가. 유족회와 부상자회가 농성 중이지만, 문화전당 공사는 재개돼야 한다. 이제 5월 단체들이 단체간 기득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로서 역할에 고민해야 한다.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민·군 공용 공항인 광주공항의 이전을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공항 소음 피해 국가배상 판결

집단 손해배상소 금물살 추가소송도 봇물 이룰 듯

광주공항의 소음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2004년 이후 제기된 공항 소음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금물살을 타게 됐다. 또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추가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모두 7건에 원고 수만 2만6천900여명에 이른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3만1천25명을 합하면 손해 청구인수는 무려 6만명에 육박한다.

배상 청구액은 환경영향평가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개개인의 전입 시기와 거주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최소 20억원, 최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공항 소음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근 관련 사건 7건 중 2건을 시범지정해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시범 지정한 소송은 최초제 등 광주 주변 주민 1천875명이 지난 2005년 5월, 고모씨 등 또 다른 주민 673명이 2006년 8월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들 소송은 지난해 3월 재판 이후 원고측 감정 절차 지연 등으로 11개월째 속행이 미뤄져 왔으나, 감정촉탁 용역 계약에 이어 최근 감정결과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1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나머지 재판들도 원고의 신청과 거주기간 등 원고측 관계서류가 마무리되는 대로 속행될 예정이다.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상반기안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가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2007년부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 1만 3천여명을 모집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손해배상 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공항소음 소송을 맡은 대다수 법원이 '80웨벨'을 배상 기준으로 정한 가운데 광주공항 인근 거주지 상당수가 이를 초과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액도 '80웨벨' 이상으로 측정된 지역 주민에 대해 369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송에서도 '80웨벨' 이상인 지역 거주자에게 총 127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속행된 광산구와 서구 주민 2만7천여명의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역시 이 같은 판례를 감안한다면 적잖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들 공항 소음 관련 소송을 민사6부에 일괄배당하는 한편, 광주시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 조화와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 그동안 재판지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피해 감정도 용역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감정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금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문화전당 1km 이내 15층 이상 신축 제한 금남로에 '랜드마크' 건축물 2동 건립

경관관리 연구용역 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축으로 1km 이내에는 15층 이상 건물의 신축이 제한될 전망이다. 문화전당의 조망권을 보호하고 동구 일대 구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8일 문화전당 일대를 권역별로 나눠 신축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전당 권역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중점관리권 ▲문화전당 주변권역 등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관리권역은 전당 주변을 보호전망권(무등산 전망권)과 스카이라인관리권으로 설정, 문화전당권내 조망권을 기준으로 무등산 7부 능선 이하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점관리권역인 보호전망권의 경·중경(1km이내)내에서는 최고 42m(약 14~15층)까지, 1km부터 2km이하 권역은 최고높이 72m(24~2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스카이라인 관리권내에서는 평균 높이 72m 이하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또 고도제한에 따른 전당권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랜드마크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의 초고층 건축물 2동을 금남로 4가와 5가 인근에 세우는 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관관리 계획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연구용역 실험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09 진주남강 마라톤대회

2009. 4. 26. 진양호 마라톤코스

주최 : 진주시체육회, 100% 시민 후원회
주관 : 진주시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주최 : 진주시체육회, 100% 시민 후원회
주관 : 진주시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진주시민체육회

문의 : 진주시체육회 Tel. 054-770-1100 Fax. 054-770-1100